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뭔가” 이태원 헬터윈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의문이다. 참작(慘劫)의 고통 속에 생애같은 아들딸을 가슴에 품어야 했던 유가족들은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질투했다. 광주 지역 111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달 이런 물음에 적힌 플래카드를 5·18 민주광장에 내걸었다.

158명의 쫓다온 청춘들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숨졌다. “압사할 것 같다” “살려 달라”는 구조 요청이 쇄도할 때,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서 뒤엉킨 젊은이들이 질식사할 때,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로를 도운 건 시민들이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책임 회피·꼬리 자르기’ 정부의 민낯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라고 했다.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제34조 6항)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데 이 조항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참사 이후 한 달여, 하루하루 드러나는 진상은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사고 발생 네 시간 전쯤인 저녁 6시 34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열한 차례나 접수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시 묻는다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10만 명 이상이 이태원 일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인파 통제와 돌발 사태 대처를 위한 기동대 배치 요청조차 묵살됐다. 행사를 앞두고 작성된 경찰의 안전 대책 정보 보고서는 참사 이후 삭제됐다.

사고 발생 보고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이나 수습을 총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받았다. 어찌된 일인지 보고 체계가 뒤집히면서 지휘 혼선과 낙장·부실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언죽번죽 둘러댔다.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도 “누군가를 풀 나게 사표 던지고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며 손사래를 쳤다.

재난 안전망은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막통이었다. 정부는 처음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 없다는 투로 대응했다. ‘참사·희생자·피해자’ 대신 ‘사고·사망자·부상자’로 표기하려는 공문을 시도에 보냈다. 책임 회피와 의미 축소에만 급급한 태도였다.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김은혜 홍보 수석은 참사 관련 질의응답이 오가는 사이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 참사 이후 정부와 여권은 ‘재난의 정치화’라는 프레임 구축에만 골몰하는 듯했다. 수사가 먼저라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였다. 그러다 보니 희생자들을 지켜 주지 못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

전대미문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는 수사 역시 경찰·소방·구급 등 현장 책임자와 실무 공무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참사가 책임이 있는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까닭이다.

왕조 시대 임금들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과 천재지변까지도 자신의 부덕과 관련지어 ‘내 탓’이라며 무한 책임을 지러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운영의 주체는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데 이번 참사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을 뿐 잘못 인정도, 무능했던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진실성 있고, 제대로 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역설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이태원 참사는 위기의 징후들을 가버이여긴 데서 비롯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와 정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난의 악순환’ 고리 이젠 끊어야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고위직은 아직 없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꼽았다. 더욱이 정무직 공직자는 법적 책임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무책임이 드러났는데도 인적 쇄신을 미룬다면 리더십의 위기를 부채질할 뿐이다.

다행히 여야가 국정조사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진상 규명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쟁에만 골몰해 진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오리무중으로 돌아섰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 삼풍백화점·세월호 참사 이후 정비됐던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굵비임비 쌓인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국가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설을 통해 주장한 홉스는 국가와 권력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대형 인명 참사가 반복되면 국가 공동체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는 셈이다. 재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해 또 다른 재난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한다.

은펜칼럼



강대석
장성군 정책자문위원장·시인

장성역 앞을 지나다 보면 커다란 표지석에 쓰인 ‘문불여 장성’ (文不如長城)이란 문구를 볼 수 있다.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란 뜻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전국을 돌아보고 장성에 대해 평한 말이다.

흥선대원군이 집정할 당시 장성에 거주하는 노사 기정진(1798-1879)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지성으로 명성이 높았다. 유학자지만 경제에도 밝아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걱정하며 상소를 올려 건언을 서슴지 않은 애국자였다. 65세 때 올린 입술의책은 삼정의 폐단에 따른 개혁을 주장했고, 69세 때 올린 병인소는 전쟁에 대비한 군비 강화책과 제대로 된 정치를 강조하며 외적과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세상을 깨우쳤다. 그의 주장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반영되었고 후에 위정척사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 그의 제자들이 호남 의병을 이끄는 주축이 되었다. 그의 학문을 계승한 노사학파의 문도(門徒)는 모두 8000여 명에 달

‘문불여 장성’과 호남 유학

해 조선 후기 최대의 학단(學團)을 이루었다.

조선조 호남 유학의 유종(儒宗)은 당연 하서 김인후(1510-1560)다. 장성 맥동에서 태어난 그는 영남의 퇴계 이황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우리나라 18현에 배향되었다. 정조는 하서 선생에 대해 “학문과 절의와 문장에 있어서 이를 다 갖춘 사람은 김인후 한 사람뿐이다”라고 극찬했고, 우암 송시열도 “우리나라의 많은 인물 중에서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겸비한 탁월한 이는 거의 없는데 하늘이 우리를 도와 하서 선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하였다”라고 했다. 선생의 학덕을 그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서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필암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있는 유서 깊은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그의 정성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성 출신 학자로는 고려 문종 때 문하시중을 지낸 서능, 조선의 최고 청백리이자 백비(白碑)로 유명한 박수광, 화차를 발명하여 일관 극복에 앞장선 변이중, 청백리로 삼태수관 별명을 얻은 송흥 등 미처 열거하기 힘들다.

장성은 과거급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다. 포초장주(浦初長雉)라 하여 “과거 첫 시험에는 포천 출신이 많고 마지막 시험인 종장에는 장성 출신이 많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아마 흥선대원군이 장성을 가리켜 ‘문불여 장성’이라 평을 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

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요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과 광주·전남이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전라유학연구원 포함) 합병 이전을 두고 갈등이 있는 느낌이다. 전북은 독자적으로 전라유학연구원을 부안에 세우려 하고, 광주·전남은 기존에 광주에 있는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합병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부안으로 합병 이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자료와 유물을 기증했던 분들이 이를 취소하겠다고 이전을 반대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원론적으로 호남학 연구는 전북과 광주·전남을 아울러 하나로 모았을 때 연구 인력, 자료 수집, 연구비 확보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수도권과 영남권에 밀려 낙후된 호남이 호남학 연구까지 분리되어 추진한다는 것은 보기에 딱한 일이다.

영남을 보자.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 다 제치고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다. 그것은 안동이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서애 류성룡의 병산서원과 화회마을 등이 있는 영남 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한국학 호남진흥원도 합병 이전을 고려한다면 호남 유학의 중심지를 찾아 입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장성은 전북과 광주·전남의 경계에 있어 전주와 부안과도 가까운 호남 유학의 중심지이다. 입지 선정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고

광주시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제안

화원장의 주장에 적극 찬동한다. 여기에 자치구의 명칭을 들으면 광주 시민들이 곧바로 ‘아 저기가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함을 추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치구의 지역적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좋기 때문이다. 가령 동구를 ‘무등구’로 하지는 의견이 있는데 도대체 무등구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 뿐 아니라 북구도 무등산 자락에 접해 있어 혼란이 오기도 한다.

앞에서 제시한 관점을 고려해 보면 각 자치구의 동명(洞名) 가운데서 그 자치구의 중심이 되고 역사성이 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동의 명칭을 뽑아 그 자치구의 명칭으로 삼는 것이 거부감 없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폭넓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구는 ‘충장구’ ‘금남구’ ‘서석구’ 가운데 뽑으면 좋다. 이들 명칭은 모두 광주의 역사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명칭이고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구도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충의의 고장 광주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있으며 구도심의 한 중심인 충장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남구는 지역 역사성이 서려 있는 ‘효천구’ ‘효덕구’,

구의 한 중심이고 남구정이 있으며 광주의 남쪽 관문 백운로터리가 있는 ‘백운구’ 가운데서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효천구’ ‘효덕구’는 뜻도 좋지만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백운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북구는 전남대학교가 있는 ‘용봉구’, 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문흥구’가 좋다고 생각한다. 좋은 인제가 난 다다가나 문화가 흥성하게 일어난다는 뜻도 아주 좋다. 서구는 시의 중심인 사창이 있는 ‘상무구’, 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화정구’ 둘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다. 서구의 지역적 위치를 파악하고 인식하기도 쉬워 좋다.

광산구는 본래 광주를 뜻하기도 하고 광산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므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굳이 바꾸고자 한다면 구의 한 중심에 있고 교통의 중심 광주송정역이 있는 ‘송정구’가 좋다.

이상과 같이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자치구의 중심을 이루는 동의 명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혼란이 적고,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손상 없이 그대로 유지했고, 무엇보다 누구나 구의 지역적 위치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社說

자립 준비 청년들 실태 파악·지원책 서둘러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동들은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이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한다. 한데 전남 지역에서 아동 양육 시설을 떠난 이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 준비 청년 중 20%에 달하는 136명이 지원 기관과 연관이 끊겨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실태조사로 파악된 전남 지역 자립 준비 청년들은 모두 1128명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다. 이들 중 전남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관리 중인 인원이 688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문제는 688명 중 군 입대나 결혼·출산 등에 따라 본인 거부로 실태 파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락이 두절된 136명의 행방이다. 광주의 경우 자립 준비 청년 491명

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전남의 미확인 청년 숫자가 너무 많아 지역 사회의 우려가 크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양육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 중이던 10대 ‘자립 준비 청년’ 두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져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채광하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공공 지원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립 정착금은 1인당 500만 원 안팎이고,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3년간 지원하는데 이는 월세 내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다더서 청년들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뒤 일상에서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주거·의료 등 각 분야에서 촘촘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진학·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속한 소제 파악을 통해 상담과 멘토링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배달 대행’ 범죄 악용 안 되게 업체 관리 대책을

지난 2일 새벽 광주시 동구 총장로 귀금속 거리에 자리한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대담하게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순 뒤 15초 만에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으나 불과 아홉 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12살 초등학생을 비롯해 15살 중학생, 16살 고교 퇴학생 A군 등 10대들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빌린 오토바이 수리비 150여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 대행 업체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2 광주 배달 라이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광주 지역 12곳의 배달 업체별 평균 배달 기사 수는 567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 비중은 32.6%(184.7명)에 달한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에 뛰어들어 청소년들은 오토바이 임대료와 보험료, 배달 수수료, 기름값, 밥값 등 하루 최소 6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건당 3000~3500원의 배달비를 받아 수익을 내려면 20건 이상 배달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면허로 운전이 미숙한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일삼아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더욱이 유상 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배달 대행 업체들은 무면허인 청소년에게 배달을 맡기고 있다. 따라서 배달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 등록제를 도입해 업체들에게 오토바이 면허 확인은 물론 보험 가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無等鼓

1995년에 광주에서 기우제(祈雨祭)가 열렸다. 1994년부터 2년에 걸친 남부 지방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도심에서 태어난 기우제가 열린 것이다. 기우제는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의 파종이나 성장에 해가 있을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의(祭儀)다. 어느 정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이나 신, 혹은 이에 준하는 존재에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농경 사회였기에 기우제는 여실히 증명하고 막

려 3122건이나 나올 정도로 여전히 비에 의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태종실록에는 “수한(水旱)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갈고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人事)를 닦고 천시(天時)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했다. 장마와 가뭄은 하늘의 뜻이니, 하늘이 주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자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땀을 짓고, 수백km에 달하는 수도관을 깔아 물을 조절하는 각종 기술이 발달했다. 하지만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여전히 현대 문명의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여전히 증명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남부 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 상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이 최근 20%대로 떨어지면서 내년 3월께면 고갈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민 1인당 물 20% 절약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많은 시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21세기에 기우제는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다. 이번 가뭄은 기우제가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되길 기대해 본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